

하남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1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. .

발 의 자 : 김은영 의원 (인)

1. 제안이유

- 기존 조례에 조항 누락 등으로 시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등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에 대한 공사완료 기한 명시(안 제3조)
- 나. 원인자가 실시하는 공사시행 시 공사시행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(안 제4조)
- 다. 별표 시공기준 신설(별지)
- 라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개정(안 제명, 안 제1조 ~ 제7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9년 1월 22일 ~ 1월 30일(8일간)

나. 의견내용 : “의견 없음”

8. 부서협의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건설과

하남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하남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”를 “하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에 적용한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”으로, “부과징수”를 “부과·징수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“보호구역”이라 함은 도로구역중”을 ““보도구역”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다음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시장”을 “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”를 “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해당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)”을 “(원인자가 실시하는 공사시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의하여 그”를 “따라 해당”으로, “준공검사”를 “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”를 “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

간 내” 로, 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공사완공후 7일이내” 를 “공사완료 후 7일 이내” 로,
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예에의하여” 를
“예에 의하여” 로 한다.

제7조 중 “규칙을” 을 “규칙으로” 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하남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</u></p> 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<u>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에 적용한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</u>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(정의) ① (생략)</p> <p>① “<u>보호구역</u>“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“원인자“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<u>당해 타공사</u>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<u>다음각호</u>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하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 (목적) ----- <u>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<u>부과 · 징수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 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“<u>보도구역</u>“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제3조 (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)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4조 (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)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 (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)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.

제6조 (비용의 부과징수)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공사

제3조 (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) ① -----
-----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 ----- 해당

---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해당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 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

제4조 (원인자가 실시하는 공사시행) ----- 따라 해당

-----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 --.

제5조 (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) ----- 제3조
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 -----

해당 -----

-----.

제6조 (비용의 부과징수) ① -----

공사완료 후 7일 이내 -----

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선정
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
한다.

② (생 략)

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
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
채납처분의 예에의하여 징수할 수
있다.

제7조 (규칙) 기타 이 조례 시행에
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.

① · ② (생 략)

---- 해당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예에 의하여 -----
--.

제7조 (규칙) -----
----- 규칙으로 -----.
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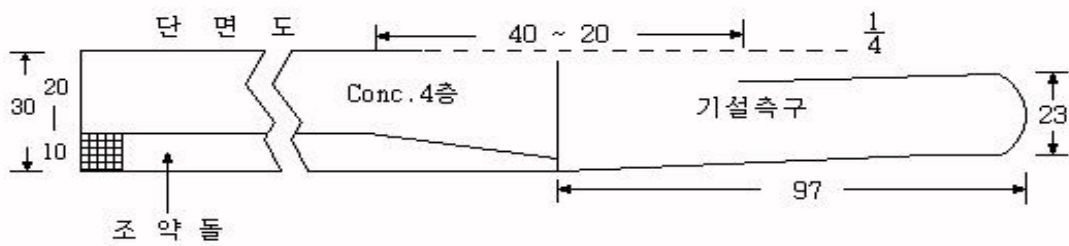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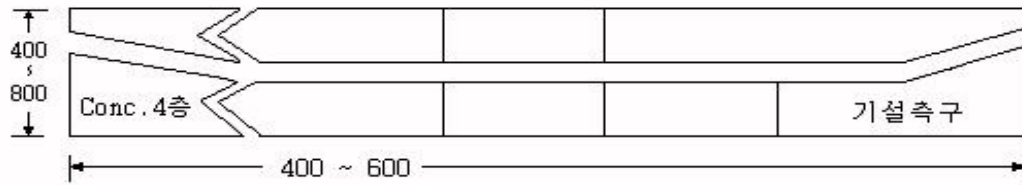
<별표 신설>

[별 표]

시 공 기 준

1. 횡단차도시설평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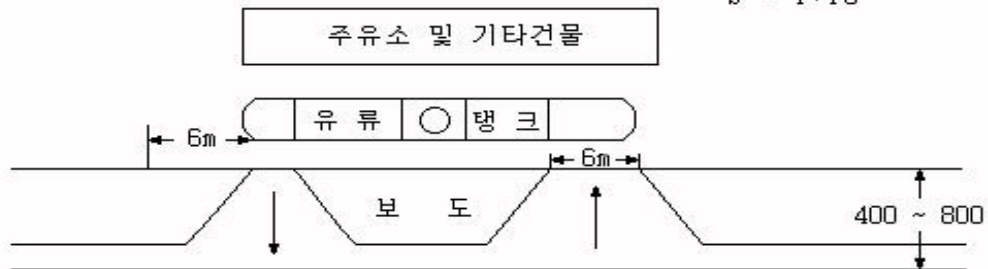
$S = 1:10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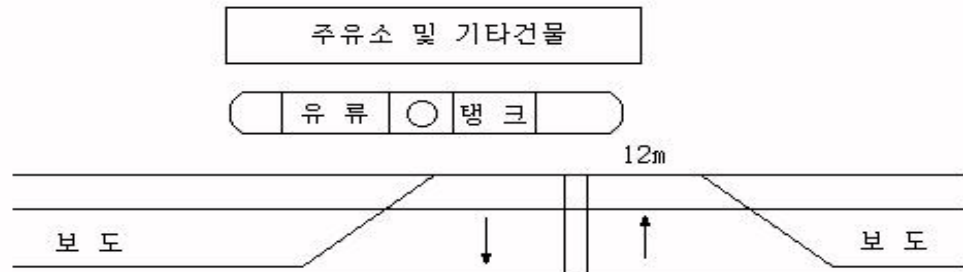
2. 차도쪽에 따른 평면도

① 폭 12m 이상의 경우

$S = 1:10$



② 폭 12m 이하의 경우



관계법령 발췌서

【도로법】

제35조(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)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(이하 “타공사“라 한다)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(이하 “타행위“라 한다)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타공작물의 관리자“는 “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“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,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1조(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)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·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.

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및

보험요율 산출기관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·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1. 이름(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) 및 주소
2. 주민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
3. 자동차등록번호·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·이전·말소에 관한 정보
4.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

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,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